

## ▶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·징수 등

⑩ 납세의무자(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관세·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채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「국세기본법」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「국세징수법」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·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(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)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1. 1., 2019. 12. 31., 2020. 12. 22.>  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
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	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	
<p><b>제20조(납부의무의 소멸)</b>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. &lt;개정 2019. 12. 31., 2020. 12. 29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</li> <li>2.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</li> <li>3. 제21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</li> <li>4. 제22조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</li> </ol> <p>[전문개정 2010. 12. 30.]</p>		
<p><b>제21조(관세부과의 제척기간)</b>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 다만,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. &lt;개정 2011. 12. 31., 2013. 8. 13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삭제 &lt;2013. 8. 13.&gt;</li> <li>2. 삭제 &lt;2013. 8. 13.&gt;</li> </ol>	<p><b>제6조(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)</b>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. &lt;개정 2001. 12. 31., 2012. 2. 2.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</li> </ol>	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·판결·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 
〈개정 2020. 12. 22.〉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그 결정·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
    - 가. 제5장제2절(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)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
    - 나.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
    - 다.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
    - 라.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
  2. 이 법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및 조약·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,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
    - 가.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
    - 나. 이 법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및 조약·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
 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
    - 가. 제38조의3제2항·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
    - 나.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
-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[전문개정 2010. 12. 30.]

2.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
3.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
  - 가.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
  - 나.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(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)이 만료되는 날
4.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
5.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(다만,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)